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고용노동 시스템의 위기 대응 능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는 인류가 경험한 바이러스 중 일상 생활과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전염병 중 하나일 것이다. 교통 수단의 발달과 국가 간 서비스 교류의 확대로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의 발달로 지구 곳곳에서 신음을 앓고 있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역설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의 등장은 낮아진 치명률로 인하여 감기처럼 여겨지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19의 종식을 말하기에는 선부르다. 오히려 높은 감염 가능성으로 인하여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체계의 부담을 느끼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년여 동안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의 대응 능력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그만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국가들이나 미국과 달리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적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전염성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 양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양태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지난 2년간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들이 관측되고 있는가?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이번 호 특집으로 경제 규모로 3대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들도 있지만, 각국의 경제와 노동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필자들의 해안과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실들에 대한 조명이 새롭다.

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이제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구직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사율의 상승은 여전히 육아와 가사를 감당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공급망 차질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등과 결합되면서 특히 저임금 계층에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더욱 빨라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국편 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미국구제계획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JJA)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 미국 경제가 더욱 활력을 찾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에 대응한 테이퍼링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는 확실히 봄이 올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동요는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귀를 저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국은 위드코로나보다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방역 정책을 과시하고 있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최 등을 계기로 정치경제적 순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상황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들이 많아, 비록 정부의 강압적 통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단점은 있지만, 경제와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정하게 억제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실업률은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질적인 양극화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노동자 단체행동의 증가는 중국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제조업이 수출 실적을 토대로 성장을 이어간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비

스업의 위축과 대졸자의 취업난 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초래한 저임금노동자 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G2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이 빈곤 계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구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성공적으로 방어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고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의 급증 이전 단계까지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편 필자는 그 요인 중 하나로 고용조정조성금이 라는 제도적 장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안전판은 고용조정 필요성을 낮추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의 고용조정이라는 용어는 전업시간 축소나 상여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불균등한 영향에 대해서는 역시 주의와 경계를 늦추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은 수준으로 제고해야 고용과 근로조건에 양호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신호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시다 정부는 과거 아베노믹스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확충을 겨냥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약화된 일본 노동운동에 대해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최근 2년간 부침이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 16.9%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2020년 말 조직률인 14.2%와 큰 차이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더욱이 일본편 원고에서 보여지듯이 최근 조합원 수 증가는 파트타임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어서, 조직력의 강화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본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양상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공통적 현상 속에서도 각국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들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일본의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었던 것도 인원감축을 피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관행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하면 미국에서는 일단 해고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고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특성이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여지 없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파워는 크지 않은 나라여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조의 역할과 영향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미국에서 최근 수년간 노조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향후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해 나갈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화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나타난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시위 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안정된 노동문제 대처 방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거대한 3개 국가의 사례는 여전히 우리에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제도와 노사관계 시스템의 과제들을 환기시켜 준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했다면 선거 국면 이후에는 외국과의 비교, 그리고 우리 경험의 반추를 통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 대응태세를 다듬어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KLI**